
2016년 업무계획

2016. 1. 26.(화)



행정자치부

|| 목 차 ||

I. 정부3.0 생활화 1

- 1. 데이터 개방 확대 및 창업 촉진 4
- 2.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6
- 3. 국민이 직접 만드는 생활정책 7
- 4. 범정부 협업 활성화 8
- 5. 新국제협력모델로서 새마을운동 세계화 10
- 6. ICT 기반 스마트 행정 구현 11
- 7. 생활이 편리한 서비스 정부 13
- 8. 정부3.0 전면 확산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18

II.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지방자치 19

- 1. 지역경제 활력 증진 22
- 2. 국민 체감형 지방규제 개혁 24
- 3. 주민행복 중심의 지역발전 26
- 4. 자치제도 개선 및 사회통합 기반 강화 27

III.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29

- 1.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32
- 2.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편의 제고 33

정부3.0 생활화

1. 정부3.0 생활화

< 2015년 주요 성과 >

□ 정부3.0 분야별 가시적 성과 창출

- (서비스 정부) 사망신고 시 상속재산 조회신청까지 할 수 있는 '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' 개시(방문기관 7곳→1곳)
 - 장애인·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서비스 일괄 대행, 민원24에서 생활정보 21종 통합제공 등
- (투명한 정부) OECD 발표 공공데이터 개방 1위 달성('15.7월)
 - * 개방 건수 3배 증가('13년 5천개 → '14년 12천개 → '15년 16천개)
 - 다운로드 활용 56배 증가('13년 14천건 → '14년 153천건 → '15년 789천개)
 - 앱·웹 개발 17배 증가('13년 42개 → '14년 395개 → '15년 695개)
 - 원문정보공개 대상기관을 기초자치단체, 교육청까지 확대
 - * 중앙행정기관, 시도('14.3월) → 시·군·구, 교육청('15.3월)
- (유능한 정부) 고용복지+센터 확산(40개소) 및 취업성과 가시화, 626개 행정·공공기관에서 148종 정보를 연간 2.8억건 공유

□ 클라우드·빅데이터 기반 효율적 업무환경 구축

- 전 부처가 사용하는 업무관리시스템(온-나라)의 클라우드 전환
 - 영상회의 확대*, 스마트워크 이용 활성화, 바로톡 개발·보급 등
 - * 중앙부처·국회·지자체 연계 완료('14년 71개 → '15년 273개)
 - 영상회의 실적('14년 36,769회 → '15년 76,353회)

□ 대국민 홍보 강화 및 인지도 향상

- 정부3.0 체험마당('15.4.30~5.3.)*, 부처 통합홍보 추진
 - * 62개 기관 156개 콘텐츠 소개 / 국민 4만여 명 참가·체험
- 대국민 인지도 : '14.7월 34.6% → '15.8월 35.1% → '15.12월 47.2%

1-1

데이터 개방 확대 및 창업 촉진

- ◇ 민간 활용도가 높은 국가 중점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개방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를 통한 창업지원

□ 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

- 민간 활용도가 높은 22개 분야 데이터를 당초 계획보다 조기 개방하고, 다수요 공공데이터를 추가로 개방(싱크홀, 대학진학률 등)
 - * (당초계획) '15년 10개 → '16년 12개 → '17년 14개
 - (조기개방) '15년 11개 → '16년 22개 → '17년 3개
- 결재문서 실시간 공개 대상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*하고, 국민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중심으로 정보의 질 제고
 - * ('15년) 484개 중앙·지자체·교육청 → ('16년) 600개(+116개 공공기관)

□ 개방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

-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개방형 실시간데이터(Open API) 제공대상 정보(31종→70종) 및 오픈포맷 비중 확대(40%→60%) 확대
- 고품질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를 대상으로 '데이터 품질등급제'(1~5등급) 도입

□ 공공데이터 이용 창업지원 및 활용 기업 육성

- 전국 단위의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지원체계 마련(지자체 공동 추진)
 -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지원 지역거점인 오픈랩 확대(2개소 이상)
- 맞춤형 컨설팅, 투자유치 등 예비창업자 집중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육성(선도기업 10개, 활용기업 500개)

참고

2016년 개방 데이터 주요 내용

순번	기관	DB명	주요 개방 내용	일정
1	행자부	지방재정DB	·지자체·공기업·교육기관 세입출규모 등 68종	1/4분기
2	국토부	부동산거래관리DB	·토지매매 실거래가 개방 및 GS 연계 API제공	
3	법제처	국가법령정보DB	·법령·자치법규 연계정보	
4	식약처	식의약품종합정보DB	·의약품정보, 해외위해정보 등 9종	
5	행자부	도로명주소DB	·도로명주소안내도, 주출입구요약정보 등 2종	2/4분기
6	특허청	산업재산권정보DB	·특허상품연계정보, 심판서지정보 등 4종	
7	심평원	건강진료정보심사DB	·의약품관련 3종 API서비스 제공	
8	근로복지공단	노동보험DB	·산재보험가입사업장, 행정심판사례 등 2종	
9	통계청	국가통계통합DB	·시군구 기본통계, 미래산업실태조사 등 200종	
10	안전처	국가재난관리정보·생활안전지도	·임시거주시설, 재난발생정보 등 24종	3/4분기
11	국토부	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DB	·부동산종합정보 등 15종	
		공간정보오픈플랫폼(브이월드)	·대기환경규제지역 등 15종 API	
12	교육부	교육행정정보DB·학교알리미	·대학진학률 등 39종	
13	고용정보원	고용보험DB	·고용보험원천정보 4종	4/4분기
14	환경부	폐기물DB	·통계정보제공에서 API개발로 원천정보	
		음식물쓰레기DB	·배출관련 정보 3종	
15	국토부	도시계획정보DB	·도시·군관리계획 등 4종	
16	해수부	해운항만물류정보DB	·항만물류품질개선 및 처리실적 등	
17	관세청	수출입무역통계DB	·수출입무역통계 등 10종	
18	조달청	국가종합전자조달DB	·조달데이터 7종 및 API 제공	
19	해양조사원	해양공간정보DB	·해상구역도, 어장정보도 등	
20	국민연금공단	국민연금DB	·장애연금심사정보 등 3종 API 제공	
21	기상청	날씨예보자료DB	·위성영상 등 6종 및 API 제공	
22	미래부	국가과학기술연구DB	·학술논문 등 2종 API 제공	
	산업기술진흥원	산업기술정보DB	·연구성과요약정보 등 2종	

◇ 실효성 있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정책 추진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□ 주민번호 이용을 최소화하도록 본인확인 제도 개선

- 성명·휴대폰번호·생년월일 등을 이용한 본인확인을 유도하고, '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 및 본인확인 가이드라인' 제정 추진
- 주민번호 과잉수집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 법령 정비
 - ※ 시행령·시행규칙 257개, 자치법규 5,085개 정비 추진

□ 개인정보 위탁관리회사에 대한 점검 강화

- 학원 수강생, 병원 환자 등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위탁 관리하는 업체(80개)에 대한 실태 점검 강화
 - ※ 위탁관리업체 1개사가 평균 788개사를 관리, 점검 파급효과 극대화

□ 업종별 민간자율규제 체계 마련

- 업종별 민간사업자 협회·단체를 '민간자율규제기구'로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체규범 제정권·점검권 등 일정 권한 부여
 - ※ 민간 협회·단체 주관 자체점검 등 자율규제체계 시범운영 (5월~)
- 개인정보보호 시민 모니터단('개인정보 지킴이') 및 개인정보 침해 사고 신고포상제 운영 등 국민참여 감시체계 마련

□ EU 개인정보보호 수준 적정성 평가 획득 추진

- 국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EU기준에 맞춰, 국내기업들이 EU시장 진출 시 별도의 추가규제를 받지 않도록 지원(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*)
 - * 개인정보 국외이전 기준 마련, 해외 침해사고 대응 관련 규정 도입 등

- ◇ 정책 개발 과정에 국민 참여 방식을 다양화하여 적극적·능동적 참여로 국민이 원하는 정책 개발

□ 온라인 참여 기반 마련

- 공원이름 공모·금연구역 확대 등 지역현안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스마트폰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‘주민참여 정책마당*’ 확산
* ‘주민이 댁가노니’ 주민참여 정책마당 앱 관련 공모전(3~6월)
- 정부가 앱을 개발해서 국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, 국민이 정부서비스 앱을 개발·활용하는 방식 활성화

□ 국민디자인단 운영 활성화

- 정책과정에 중앙·지자체·공공기관 ‘국민디자인단’ pool 확대(1.5천명→2천명)
 - (중앙부처) 생활안전 등 분야별 디자인과제 발굴·개선
 - (지자체) 대학 등과의 협력 및 재능기부와 연계하여 지역주민 참여를 내실화하고 생활과 밀접한 지자체 특화과제를 중점 선정

□ 생활공감 모니터단 전문성 강화

- 중앙·지자체·공공기관 간 국민디자인단 활동 우수자 pool 공유 등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
-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을 직능별·분야별로 분류하여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의 전문성 제고

□ 국민평가를 통한 공공서비스 품질 강화

- 국민의 서비스 이용데이터(콜센터, 민원, 온라인 접속기록 등)를 기반으로 공공서비스 품질지수 개발, 성과측정 및 결과 공유·활용
- 공공서비스의 전반적 수준 향상을 위해 비중이 높은 주요 서비스 유형별로 제도(업무처리지침 등), 사무환경 등의 표준모델 마련·보급

◇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추진

□ 고용복지+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강화

-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지역에 고용복지+센터 우선* 설치(상반기)
 - *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지역 중 인근 고용복지+센터 미설치 11개 지역
(서울, 부산, 인천, 대전, 울산, 세종, 경기성남, 전북전주, 전남여수, 경북포항, 경남창원)
- 센터 간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
 - (협업체 구축) 양 센터 간 상설 협업체를 구축하여 지역 내에서 일자리와 복지의 수요·공급을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련(6월)
 - (시스템 연계) 구인·구직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연계(6월)
 - * 고용정보시스템(워크넷)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
 - (인력 지원) 창조경제혁신센터(고용존)에 고용서비스 전담 인력(2명)을 파견하여 취업상담·일자리 알선·직업 교육 등 지원(6월)

□ 지역통계 고도화로 정부3.0 구현

- 지역통계 발굴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 통계발전 TF 구성·운영(2월) 및 통계청 전문 인력과 지자체 간 인사교류 추진
- 통계 기반 정책평가 범위를 자치법규(약 85천건)까지 확대하여 지자체 스스로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통계 생산을 유도(3~10월)
- 지역 맞춤형 통계생산을 확대하고 통계전문 매뉴얼을 제작·보급하여 기초 지자체의 통계역량 강화 및 정책자료 다양화(12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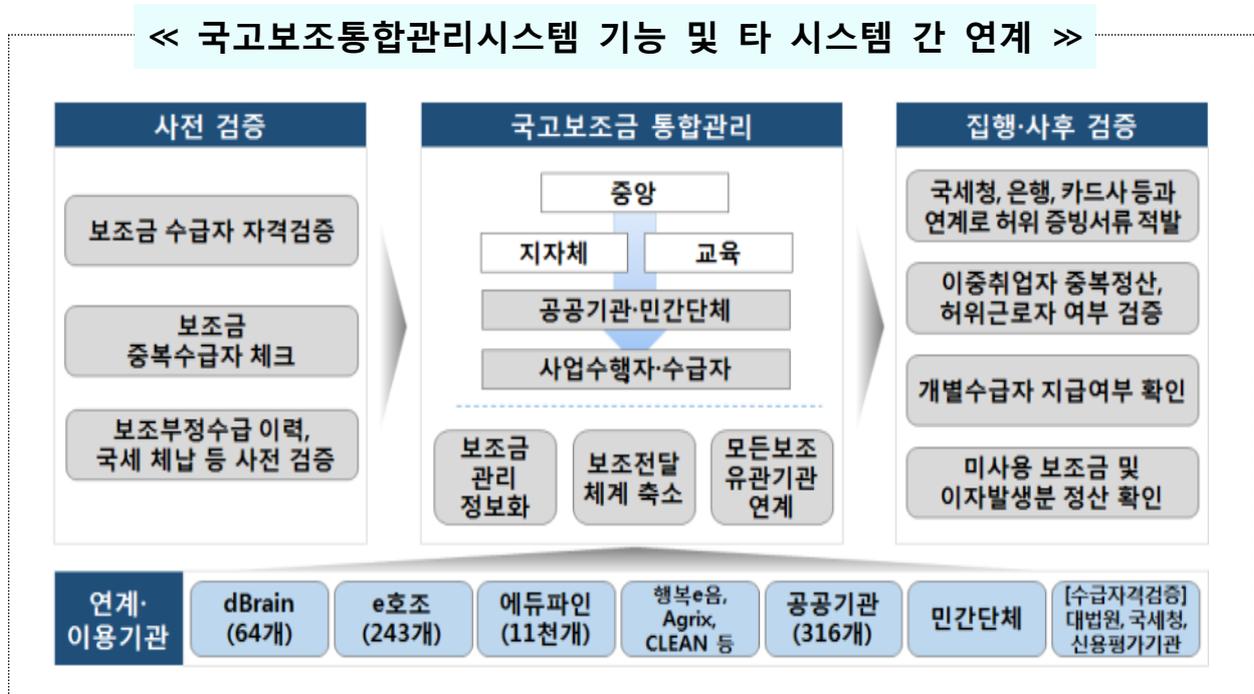
□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협력

- 기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* · 처리를 위해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전반(예산편성, 교부, 집행, 정산, 성과 등)을 전면 개편하여 관리

* d-Brain(기재부), e호조(행자부), 에듀파인(교육부), 행복e음(복지부)

- 시스템 개발 전문업체 선정 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e호조 기능 개선('16년)

※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오픈('17년 하반기)



□ 부처 간 연계기능 분석 및 협업 모델 개발

- 중앙·지자체 공동사무 중 연계·협력이 필요한 중점과제를 선정,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업무 수행 원활화

※ (예시) 감염병 역학조사·검사 관련 부처-지자체 간 업무 프로세스 개선

- 공항·항만 검역기능 강화를 위한 세관·출입국·검역 정보 통합관리 및 협업체계 구축

◇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추진체계 및 현지 추진역량을 재정비하고 기존 ODA와 차별화된 모델을 구축하여 국제적 확산의 전기 마련

□ 새마을 ODA 총괄체계 구축

- 각 기관의 사업이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마을 핵심가치·철학을 반영한 새마을 ODA 표준지침 마련 및 배포(2월)
- 관계기관*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업 플랫폼 운영(6월)
 - * 행정자치부, 외교부, 국무조정실, 농림축산식품부, 기획재정부 등
 - 새마을 ODA 사업계획 수립, 유사·중복사업 연계·조정, 사업 사후 관리 및 성과 모니터링 등 기능 수행

□ 새마을 교육 체계화

- 새마을운동 핵심요소를 반영한 표준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·보급을 통해 새마을정신의 함양 및 의식개혁 촉진 등 교육효과 제고
- 연수생 통합DB 구축 및 중장기 모니터링 등 교육 사후이력관리를 통해 교육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새마을운동의 자발적 확산체계 마련
- 국내외 교육시설·교수요원 등 교육인프라 통합관리 및 교육성과에 대한 메타평가 실시

□ 현지 추진역량 강화

- 새마을 수요가 집중된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현지 ODA 협의체를 활성화 하고, 우수 공관에 대해 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 제공
- 현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, 새마을금고 ODA 본격 개시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·지속적 추진역량을 대폭 강화

◇ 범정부 문서·협업·지식 포털 통합으로 지식 공유체계를 일원화하고, 업무지식을 개인 PC 대신 클라우드에 통합 축적·관리

□ 언제·어디서나 일 잘하는 현장 중심 행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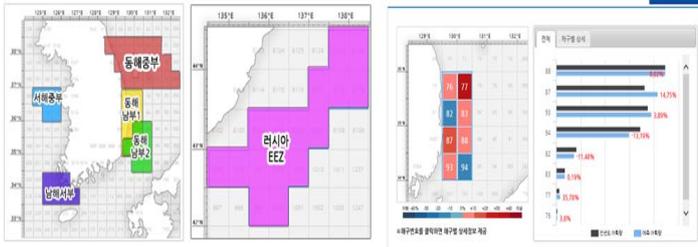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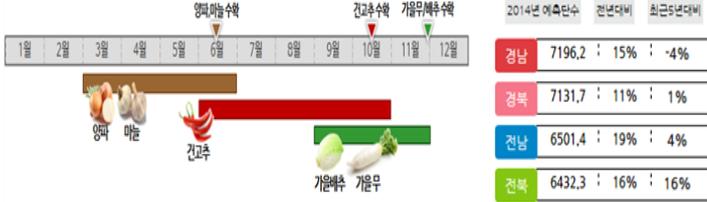
- 이동·출장 중 e메일, 메신저 등을 통한 모바일 환경의 결재방식 도입
 - ※ 행정자치부 대상 시범운영 후 타 기관으로 확산 추진
- IoT 기반의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발굴·확산하여 국민 생활불편 개선
 - ※ '16년 추진과제 4~5개 선정(2월), 사업 추진(~12월)
- 중앙부처, 지자체 등 행정기관 간 영상회의 연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, 영상회의 의무 이용비율 상향 추진 (60% → 70%)
-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 개편 추진
 - 공공 스마트워크센터 민간 개방 및 세종시 이전 후 공무원 거주지 변화 등을 반영한 이전 및 통합 추진

□ 클라우드 기반 협업 환경 구현

- 온나라(문서관리·메모보고), 정부통합지식관리시스템, 나라e음(영상회의, 메신저)을 온나라 업무포털로 통합
- PC대신 클라우드에 자료를 통합 저장하여 부서·기관 간 공유, 실시간 공동 편집 및 모바일로 열람 활용 가능
 - ※ ('16년) 18개 부처 → ('17년) 21개 부처
- 정부 주요업무시스템(740개)을 '17년까지 클라우드로 전환
 - ※ ('15년) 418개 → ('16년) 562개 → ('17년) 740개

□ 빅데이터 활용 강화

- 민원·안전·교통 등 10대 분야 빅데이터 표준 모델을 마련하고(8월), 多분야 융합서비스* 개발·확산 등 빅데이터 활용 강화
 - * 기후·관광·수산 융합서비스 등
- 클라우드·빅데이터 기반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(~'18년)
 - ※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설립 추진 등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('16년)

분야	융합 서비스	활용·기술이전
수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양기상정보(수심별 수온, 염도, 유속 등)를 활용한 오징어 서식환경 분석을 통해 어획량 변동성 예측 ※ 대상해역: 동해중·남부, 남해서부, 서해중부, 러시아EEZ ※ '16년 서비스 고도화 추진 예정 <p><오징어 어획량 변동성 예측 서비스 예시>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활용분야 어민들의 경제적 조업 활동 · 관련기관 해수부, 수협, 국립수산물과학원 등
관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국 관광코스별 기상정보 서비스 및 지역별 관광 기후지수 생산 ※ 대상지점: 전국 2,000여개 주요 관광지 대상 <p><관광코스 기상정보 서비스 예시>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활용분야 국내 여행 활성화 및 내수 경기 진작 · 관련기관 문체부, 지자체, 기상사업자, 여행사, 앱개발자 등
농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생육시기별 기상영향요인(일조, 강수, 기온 등)에 따른 양념채소 단수(단위면적당 생산량) 예측 ※ 대상작물: 양파, 마늘, 건고추, 가을무, 가을배추 ※ 도(道) 단위로 작물의 최종 수확 2~3개월 전부터 제공 <p><작물별 생산성 예측 서비스 예시>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활용분야 농산물 수급정책 결정 지원 · 관련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aT공사 등

- ◇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도록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선제적·원스톱·맞춤형으로 제공

【 생애주기별 서비스 】

□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(행자부)

- 양육수당, 출산 지원금,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*를 출생신고(주민센터 방문) 할 때 한 번에 신청(3월)
 - * 양육수당, 보육료, 다자녀가구 전기요금·가스요금·난방요금 감면 및 지자체 서비스
- 출생신고를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개선('17년)

□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 (교육부)

- '대학입학정보 포털'을 토대로 학생 스스로 적성에 맞는 학과·대학을 탐색하고 전형정보를 비교·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(3월)
- 유명 대학의 최우수 강좌를 디지털화 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(K-MOOC)를 확대하여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
 - ※ 연도별 강좌 수(누적) : ('15) 27개 → ('16) 100개 → ('17) 300개 → ('18) 500개

□ 민·관 일자리 정보 워크넷 통합 (고용부)

- 공공·민간부문 및 지역 워크넷 광역·기초자치단체 128개소를 추가 연계하여 총 235개소 일자리정보망을 워크넷으로 통합('16~'17년)
- '워크넷 청년' 홈페이지·어플을 개편해 청년고용통합 전산망을 구축하여 각 부처의 청년취업지원 사업 정보 등을 통합제공(1월)

□ **간편 창업 원스톱서비스** (행자부, 중기청)

- 국세청·지자체로 이원화된 영업·폐업*신고 처리시스템 연계로 원스톱서비스 대상 업종 확대(9월)
 - * 폐업신고 : (현행) 식품위생업 등 34종 → (확대) 통신판매업 등 52종
- 생활면허·자격증(요양보호사·간호조무사·안마사 등)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·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*(9월, 점차 인·허가증까지 확대)
 - * (현행) 지자체방문 또는 우편 → (개선) 온라인 또는 원하는 지자체에 신청·수령
- 생계형 과밀업종에 대한 과잉창업 예방을 위해 창업과밀지수 및 점포평가 서비스 대상지역·업종을 확대하는 등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
 - ※ 창업과밀 : ('15) 7대 광역권, 10개 업종 → ('16) 전국 30개 업종 (20개 업종 추가)
 - ※ 점포평가 : ('15) 7대 광역권, 35개 업종 → ('16) 전국 45개 업종 (10개 업종 추가)

□ **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고도화** (행자부)

-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하던 것을 전국 시·구, 읍·면·동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접수처 확대(3월)
 - * 『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규정(행자부 예규)』 개정
-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지자체 공무원에게 신청정보를 전송하고 결과도 온라인으로 확인
 - ** 금융·토지·연금·자동차·국세·지방세 시스템을 민원24 및 시도·서울시스템과 연계

□ **통합연금포털 연계 대상 확대** (금융위)

- 국민들이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연금포털 연계대상을 민간연금에서 공공연금까지 확대(6월)
 - ※ 통합연금포털 '15.6월 오픈 이후 단계적 연계 확대
- 국민연금정보를 연계하여 조회 서비스를 개시('16.1분기)하고, 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정보 연계('16년 중)

【 복지 · 교육 서비스 】

□ 개인 맞춤형서비스 제공 (행자부)

- 개인의 자격정보*를 연계 · 확인하여 전국 주민센터에서 개인 맞춤형으로 안내(결혼 · 출생 · 육아 · 취업 · 사망 등 서비스유형 8천 건)
* 가족관계등록정보, 기초생활수급, 기초연금수급정보 등 13개 기관 24종
- 개인의 욕구와 관심, 주제별 분류 등 다양한 검색 기능을 개발, 대한민국정부포털과 모바일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혜택정보 제공
* 알뜰결혼, 안심전월세지원, 은평구다문화가족지원(지역특화서비스) 등 서비스꾸러미 제공
- 국민체감도가 높은 휴면예금, 자동차검사일 등 생활정보 20종을 추가하여 「민원24」에서 통합서비스 ('15년 21종 → '16년 41종)
- 인터넷과 모바일기기(스마트폰 등) 동시 제공으로 언제·어디서나 확인

□ 취약계층 선제적 지원 (복지부, 행자부)

- 취약계층 정보*를 수집 · 분석하여 잠재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현황을 지속 관리하는 “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” 서비스 개시
* 단전 · 단수 · 단가스, 건강보험·국민연금 체납 등 총 24종
- 연말 소외계층 지원 시 지원가구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, 이를 시군구 및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

□ 학업 중단자 교육·고용·복지 종합 지원체계 구축 (교육부)

- (교육) 학업중단 사유에 따라 (공립)대안학교 취학, ‘학력인정 기관 (프로그램) 인증제’를 통한 학력 취득 등 맞춤형 교육지원 실시
- (직업훈련) 전문대·폴리텍 대학의 비학위 직업교육과정을 연계한 직업교육훈련 및 구직기회(일·학습병행) 제공
- (복지) 학교밖청소년상담센터의 상담·진로 서비스와 기타 정부·지자체가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연계 제공

【 보건 · 안전 서비스 】

□ 지역별 식중독 위험 예보 서비스 (식약처)

- 기후·보건 등 빅데이터*를 활용한 지역별 식중독 사전예측 지도 제공(3월)
 - * 평균기온, 상대습도, 강수량 등 정보 분석
- 전국단위 식중독 발생현황, 식품위생점검(음식점) 현황, 식품안전인프라 현황 등 정보를 시각화하여 국민에게 실시간 제공(4월)

□ 건강정보 통합서비스 강화 (복지부)

-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(DUR : Drug Utilization Review)를 통해 국민 개인이 본인의 의약품 복용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「개인 투약이력 조회서비스」 제공
- 건강검진결과, 진료내역 등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, My Health Bank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정보 통합서비스 강화
 - 대장암, 폐암 및 당뇨 등 질환예측 모형 추가 개발

□ 도로 위험정보 실시간 제공 (기상청)

- 도로위험기상정보 생산 시스템 구축
 - 도로경로별 위험기상정보 생산을 위한 자료수집·처리 시스템 구축
 - 유관기관 인프라 연계를 통한 도로위험기상정보 생산 환경 구성
 - ※ CCTV 영상 자료 확보, CCTV 영상 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계 필요
- 영동고속도로 강원권(여주분기점↔강릉분기점) 대상 위험기상정보 시험생산
 - 도로위험기상정보 수집·처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(11월)
 - ※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기관 협업으로 안개, 비, 눈 등 기상정보 수집·분석
 - 도로경로별 상세 도로위험기상정보 시험생산 체계 구축(12월)

【 주거·생활 서비스 】

□ 부동산 거래 편의 서비스 (국토부 / 통계청)

- 투명하고 편리한 부동산거래 '전자계약시스템'을 보급하고('16년 시범사업 → '17년 전국 확산) 금융·등기 등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추진
- 인구주택총조사 통계 및 교통·학군·시세 정보 등을 활용해 개인별 조건에 맞는 주거지역을 찾아주는 주거지분석맵 서비스 시행(3월)

□ 공공서비스포털 일원화 (행자부)

- 33천여개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대국민 민원포털 통합(가칭 '대한민국행정포털' 구축)
 - ※ ('16년) 민원24 + 정부대표포털 + 수혜자맞춤형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
 - ('17년 이후) 복지포털·워크넷 등 타 부처 포털과 연계

□ 여가생활 편의 제고 (문체부)

- 국민들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공공도서관 자료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'책이음 서비스' 확대(395개관→535개관)
- 항공·KTX·고속·시외버스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 관광객의 지역 방문 편의성 제고(한국관광공사)

□ 법률·세무 서비스 확대 (행자부 / 법제처)

-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소상공인·취약계층 등에 국세·지방세 관련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 도입
- 법령-조례 원클릭 서비스 확대
 - 스마트폰 앱에서 서비스 제공,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례의 조문 내용을 바로 검색 가능하도록 조문단위까지 연계

1-8

정부3.0 전면 확산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

- ◇ 모든 공공부문에 정부3.0 추진체계 및 선순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,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 홍보로 국민 인지도 제고

□ 정부3.0 추진체계 강화

- 기관 간 정부3.0 성과 공유를 통해 기관별로 자율적인 정부3.0 추진환경 조성(Bottom-up)
 - * 『새로운 정부3.0 추진체계 계획』 수립(1월) → 권역별·유형별 분과 구성(2월) → 분과별 자율 운영 → 성과공유대회 개최(6월)
- 중앙·지방·공공 등 부문별 정부3.0 총괄책임제 도입(Top-down)
 - * 정부3.0추진위/행자부: 공공부문·지방공기업, 교육부: 교육기관, 기재부: 공공기관 총괄

□ 선순환적 성과관리체계 구축

- 「진단→컨설팅→평가→환류」 등 성과창출을 위한 선순환체계 마련

점검·진단	컨설팅	평가	환류
·평가결과 ·실행계획 충실도 ·기관장 관심도	·현장·집중 컨설팅 ·사례중심 교육 실시 ·벤치마킹투어	·특정평가(중앙) ·개별평가(지자체) ·경영평가(공공기관)	·기관·개인 포상확대 ·홍보·성과공유 등

□ 국민 체감형 홍보 강화

- 범부처 차원의 전략적 통합 홍보 강화(국무회의 보고, 합동브리핑 등)
- 정부3.0 핵심가치를 반영하고 국민관심이 큰 정부3.0 대표 성과물을 브랜드화, 모든 공공부문의 벤치마킹 모델로 육성·홍보
 - * 정부3.0 10대 브랜드 선정 후 중앙·지자체·공공기관에 전파
- 정부3.0의 국민체험을 위한 '정부3.0 체험마당' 확대 개최(2회)
- 전국 순회 현장토론회 및 다중집합시설(청사외벽, 전광판 및 대중교통 모니터·민원실 등)을 활용한 현장·생활밀착형 홍보 추진

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지방자치

2.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지방자치

< 2015년 주요 성과 >

□ 공동체 정책 기반 조성 및 작은 경제 활성화

- 지역공동체행복지표 개발, 공동체발전국민포럼 운영('15.11.10. 발족)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
- 주민 주도로 소득·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마을기업 육성
※ 1,370개 마을기업에서 일자리 11,297개, 연매출 1,100억원 창출('15년)
-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생산적·지속적 일자리 창출('15년 잠정 16,000명)
- 야시장*, 골목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등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
* 부산 깡통시장·전주 남부시장 등 개장, 일자리 210개·연매출 35억 창출('15년)

□ 주민 참여형 지방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모델 구축

- 주민참여 끝장토론회, 규제정보 공개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규제개혁
※ 경제활동친화성 우수지역 68개('14년)에서 110개('15년)로 크게 증가
- 대성동 프로젝트, 행복홀씨 입양사업 등 주민 주도 지역발전
- 실시간 주민신고,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
※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민신고 15배 증가, 정비건수 20% 증가
- 도로·안전시설 구축 등 자전거 인프라 확대 및 이용자 편의 제고
※ 동해안(강원) 242km, 경춘선 25km, 제주환상 234km 자전거길 개통

□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내실화 및 제도 개선 발굴

- 금융 감독기관(금감원, 예금보험공사)과 합동으로 중앙회 대상 종합 감사 실시, 기준 미비 및 불건전 관행 발굴
- 체계적 관리감독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전문 인력 확충
-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마련 및 법률개정 추진
- 메르스 여파에 대응하여 영세 소상공인·자영업자 대상 총 2,477건, 748억 긴급 금융지원

2-1

지역경제 활력 증진

- ◇ 옥외광고 산업 발전 토대 마련 및 공동체 금융지원 기능 확대
- ◇ 지역 내 일자리 지속창출 및 핵심 경제정책의 지방 확산 추진

□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경제 활성화

- 광고물이 지역 명물이 되는 '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'를 도입하여 디지털 광고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 - 디지털광고물 등 신매체 허용을 위한 규제완화 기반 마련('16.6월)
- 지역 자원을 활용, 일자리 창출과 주민복지에 기여하는 마을기업 육성(100개)
- 구도심 활력 제고를 위한 골목경제(2개) 진흥, 문화·관광 자원과 연계한 야시장(4개) 조성, 마을공방(10개) 설치 등 작은 경제 육성

□ 새마을금고 서민 금융지원 및 사회공헌 확대

- 저신용자 대상 금융지원*,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등 서민 지원 확대
 - * 저신용자 전용 대출상품 지속 개발·보급, 10%대 중금리 상품 개발 등
- 중앙회 내 지역공헌재단 설립을 통해 경제적 자립 지원사업 등 추진
- 새마을금고의 공간·자본을 활용해 마을기업의 유통·판매 지원
- 크라우드펀딩 경진대회 등을 통해 새로운 지역금융 방식 확산

□ 지역경제 지원기능 강화

- 핵심 경제정책*의 지역별 추진상황 분석·평가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, 국가정책조정회의·경제장관회의 등에 안건 상정
 - * (예시) 창조경제, 청년일자리 창출, 지역특화산업 및 규제완화
- 「지역경제 정책협의회」를 신설, 지역경제 핵심이슈 발굴 및 해결 추진
- 주민이 체감하는 경제 진단을 위한 지역별 통계 개발(통계청 협업)

□ 추진 배경

- 규제완화를 위한 신규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창조경제로서의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도모하고,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

□ 주요 내용

-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 도입
 - 광고물 크기·높이·색상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미국 타임스퀘어 광장과 같이 광고물이 지역의 명물이 되는 ‘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’을 지정
 - 시·도의 신청을 받아 상업·문화 시설 밀집지역 등에 지정

해 외 사 례			
	미국 뉴욕 타임스퀘어	영국 런던 피카디리 서커스	캐나다 던다스 스퀘어

○ 디지털(digital) 광고물에 대한 규제완화 기반 마련 등

- 디지털 광고물(네트워크와 첨단 디스플레이 연결, 정보·광고 제공) 등 신매체 허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

디 지 털 광 고 물 사 례			
	디지털사이니지 (Digital signage)	미디어파사드 (Media Facade)	미디어폴 (Media pole)

- ◇ 생활불편 해소 등 국민이 쉽게 느낄 수 있는 분야에 집중
- ◇ 시·도에서 시·군으로, 제도에서 행태로 규제개혁 중심 전환

□ 생활 속 규제 발굴·해소

- 경제규제 중심에서 국민생활 밀착형 규제*까지 범위 확대
 - * (예시) 동일공간 내 허브차와 꽃 판매 불가, 등기우편 수취인 부재시 주소변경 불가
- 지역 현장에서 규제로 남아있는 지방공기업의 유사행정규제 정비
 - * (예시) 체육시설 정비로 이용 불가시 환불 불허, 공단 귀책으로 배상시 배상액 이의신청 불가

□ 지역특화 맞춤형 규제개혁

- 거점 시·군 중심의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규제애로*를 현장에서 해결
 - * (예시) 충청북도 남부권: 의료기기, 전라남도 서부권: 양식어업 등
- 지방 규제 성과점검회의(장관 주제)를 통해 지자체 맞춤형 규제개혁 확산*
 - * (예시) 지자체장 주관 규제개혁 토론회, 지방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등

□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통한 행태규제 혁파

- 적극행정면책, 사전감사 컨설팅, 인센티브 등 행태규제 개선제도 확산
 - 행태규제 교육, 평가·보상 강화, 특별감사, 법령해석 명확화 등 병행
 - ※ (적극행정) 법규개정, 유권해석, 지침·훈령 개정·폐지, 원스톱처리 등→벤치마킹
 - (소극행정) 처리지연, 규제남용, 무사안일, 비용 전가 등→행태개선
-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개선을 위한 신고제도 등 법제도 정비
 - 법제처 등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대상 법령 일제조사 후 신속 정비 추진

참고

자치법규 정비 강화 및 공개 확대 (법제처, 행자부)

□ 위임조례 정비현황 점검·정비 체계 구축

- 규제개혁 등 법령 위임사항이 조례에 적기에 반영되는지 매일 조사·점검, 입법 진행상황을 신호등 체계로 관리·공개

< 위임조례 정비현황 시연 화면 >

순번	소관부처	법령명	조문	공포일	시행일	조례 정비현황				
						정상	주의	지연	완료	계
1	행정자치부	육외왕고갈 등 관리법 시행령	제 12조(일반적 표시방법)	2014.12.9.	2014.12.9.			9	8	17
2	국토교통부	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	제 77조(용도지역의 건폐율)	2015.8.11.	2016.2.12.	70	86		10	166
3	농림축산식품부	지역농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	제 6조(시행계획)	2015.6.22.	2016.6.23.	219			24	243

□ 맞춤형 법령 개정 알림 서비스 제공

- 법령 개정의 수혜자를 산업별·분야별로 구분하여 법령 개정 사항을 해당 기업, 관련 협회 등에 통보
 - 법령 개정 알림 서비스 이용자 수 확대('15년말 8,680명 → '16년말 2만명 이상)

□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대한 국민감시 강화

- 지자체별로 공개하던 자치법규 입법예고안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모두 공개, 주무부처와 국민 의견제시 기능을 신설

< 입법예고안 의견제시 시연화면 >

번호	입법예고명	공고번호	공고일자	마감일자	자치단체	주무부처 검토의견	국민 검토의견
1	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	제 2015-742호	2015.11.6.	2015.11.25.	충북 단양군	의견쓰기	의견쓰기
2	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	제 2015-1322호	2015.11.5.	2015.11.25.	서울 구로구	의견쓰기	의견쓰기
3	삼척시 수산업·어촌 발전 지원 조례 입법예고	제 2015-758호	2015.11.3.	2015.11.22.	강원 삼척시	의견쓰기	의견쓰기
4	장기보관자동차 매각(폐차) 입찰공고 입법예고	제 2015-3호	2015.11.2.	2015.11.16.	서울 성동구	의견쓰기	의견쓰기
5	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안업무처리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	제 2015-1254호	2015.11.2.	2015.11.23.	서울 강서구	의견쓰기	의견쓰기

- ◇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발전 정책 확대
- ◇ 공동체 중심의 생태계 구축으로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 발전

□ 주민참여형 지역발전 사업 추진

- ‘고향희망심기’ 운동을 통해 고향을 위한 개인의 봉사·기부 촉진
- 사고위험 자전거·보행자 겸용도로 집중 정비 및 어린이·노인 대상 자전거 안전교육 강화 등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

□ 섬,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 활력 창조

- 섬 관리 체계화를 위한 「도서개발촉진법」 전면 개정, 접경지역을 생태·평화 공간으로 육성하는 「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」 지속 추진
- 주한미군 공여구역, 서해5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변경

□ 자발적 공동체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

- 지역재단, 공동체 오너십(Community Ownership) 등 민간 주도 재정기반 마련
- 주민주도형 공동체 발전 모델 개발, 각 부처·지자체 등에 보급
- 공동체 발전 국민포럼, 지역순회 토론회, 공동체 글로벌 한마당 등 민·관·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동체 가치 확산

□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지원

- 우수사례·기록물 공유, 정보공개 플랫폼 역할의 ‘공동체 아카이브’ 구축
- 삶의 질, 공동체 역량, 마을자원을 진단하는 ‘지역공동체행복지표’ 확산
- ‘시니어(Senior) 공동체’, ‘아파트 공동체’ 등 한국형 공동체 사업 추진

- ◇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 및 사각지대 해소
- ◇ 주민 중심의 자치제도 개선과 나눔 활성화 등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개선 및 문화 확산

□ 읍·면·동 복지 허브화 추진

- 읍면동을 주민 「복지」 센터로 전환, 시·군·구 본청의 기능과 인력을 읍·면·동으로 배치하여 방문상담·사례관리 기능 등 확대
-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임용 목표제 등 복지인력의 전문성* 강화
* 고용복지+ 센터와의 연계, 민간복지 자원 등 협업 강화

□ 주민 중심 자치제도 개선

-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2차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번호 변경제도* 도입
* 행자부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변경
- 지자체 기구설치기준에 '인구규모' 외 다양한 지표 반영, 직책의 비중·난이도에 따른 직급 책정방안 도입 검토
- 지방공무원 역량평가제 시범도입(3~4급), 전문직위 활성화 등 전문성 강화

□ 나눔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

- 자원봉사 개념(시간·노력제공 + 재능나눔) 및 기부범위 확대, 기부자 예우(포상 등) 강화 등 나눔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(관련법 개정)
- '2016 한국 자원봉사의 해' 기념사업, 1365 나눔포털 고도화 추진
- 외국인주민 지원 체계·사업 분석을 통한 맞춤형 다문화사회정책 수립,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환경개선(실태조사, 표준모델 개발 등)

□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차질 없는 지원

- 지자체·선관위 협력 통해 법정선거사무* 추진 및 재외선거제도 운영 지원
* 선거인명부 작성·거소투표신고 안내 및 공무원 교육, 선거벽보 첩부 등
- 공직기강 감찰 강화, 공명선거 홍보 등 엄중한 선거 지원

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

3. 중단 없는 지방재정 개혁

< 2015년 주요 성과 >

□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교부세 제도 개선

-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 상향조정*
* 보통교부세 : 20% → 23%(4,327억) / 부동산교부세 : 25% → 35%(1,500억)
- 특·광역시 본청이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통해 복지비 부담이 많은 자치구에 3,521억원 추가 지원
- 보통교부세 인센티브(페널티) 반영비율 확대(3.3조원→4.2조원, 8,383억원)

□ 지방세입 기반 강화

- 「지방세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*」 2단계 구축('14~'16, 3개년 사업)
* 과세자료 보유기관간 과세자료 공유 확대로 부과오류 방지 및 체납징수 강화
- 자치단체 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 설치* 등 세외수입 관리 강화
* 세외수입 부과부서(건축과, 환경과 등)별로 분산된 징수기능 통합(54개/'14.7월→139개/'15.12월)
- 지방세 비과세·감면 연장(약 3.3조원)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

□ 지방재정 책임성·투명성 강화

-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'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' 사전타당성조사 의무화
※ '15년 심사의뢰 33개 사업 중 15개 사업(45%) 반려
- 모든 행사·축제 원가정보 자치단체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면 공개
- 예외적인 재정위기 상황 시 재정회생 제도인 '긴급재정관리제도' 도입

□ 지방공기업 혁신

- 26개 중점관리기관 부채 1.5조원, 부채비율 9%p 감소
- 유사·중복기관 통폐합(21개→8개) 및 기능 조정(17개 기관)
- 142개 모든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(지방공사 60개, 지방공단 82개)

◇ 책임 있고 투명한 재정관리체계 강화, 지방공기업 혁신 지속 추진 및 가시적 성과 창출

□ 선심성·낭비성 지출 감축

- 지자체별 '행사·축제 예산 총액한도제' 도입
- 자치단체 예산낭비 신고시 「내세금 국민감시단」 참여 활성화
- 지자체, 지방공기업, 교육기관 재정정보를 통합 공개하는 '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' 대국민 서비스 실시(5.1.)

□ 지방재정 형평성 제고

- 지자체 간 재정형평성 보완을 위한 시·군 조정교부금제도(배분 및 공개기준 등) 개선 추진
- 지자체 간 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원배분 체계 개선방안 검토

□ 지방공기업 혁신 가속화

- 2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 부채비율 감축 목표 달성 추진
 - ※ ('15년) 140% → ('16년) 130% → ('17년) 120%
- 유사·중복기관 통·폐합(9개 지자체 대상), 민간경제 위축사업 민간이양(23개 사업) 등 1차 구조개혁 이행 및 2차 구조개혁* 추진
 - * 7개 지자체 대상 : 부산, 대구, 강원, 충북, 충남, 전북, 제주
- 임금피크제 본격 도입에 따라 신규 일자리(1천여개) 제공

- ◇ 합리적인 지방세 운영을 통해 주민의 추가부담 없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주민의 납세편의 증진

□ 지방세 기반 확충

- 「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」 구축 완료('14~'16) 및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전산조회 시스템 구축* 등을 통해 체납징수 강화
 - * 현재 문서·우편에 의존하는 금융정보 요청 및 제공(지자체↔은행) 방식을 전산화
-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비과세·감면 사항은 지속 유지하되, 장기화·관행화된 감면 정비 추진
-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 맞춤형 新세원 발굴 지원

□ 세외수입 관리 강화

- 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결과의 대국민 공개로 지자체간 자율경쟁 유도
- 고액·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, 관허사업 제한 제도 등 도입 추진

□ 주민편의 증대

- 핀테크(fin-tech)*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편의 제고
 - * 최근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최소 인증 결제시스템을 지방세 납부에 활용
- '17년 최초 실시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(약 600만명) 준비 철저
 - * 국민 신고절차 간소화, 자치단체 인력 총원, 전산 장비 확충, 대국민 홍보 등
- 서민층에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'마을세무사' 제도 전국 확대
 - ※ 한국세무사회와 협업을 통해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받아 전화·이메일·대면상담 제공

